



문재인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두 과제

2018. 2. 1 | 박세길_새사연 이사 | newroad2015@naver.com

* 본 보고서는 근간 예정인 새사연 지식숲 시리즈3 <진보시대 30년을 여는 프레임 혁명>(가칭) 내용과 깊이 연동되어 있다. 책 일부 내용을 미리 소개하는 측면도 있으며 책에서 구체화 될 것을 전제로 다루기도 한다.

- 목차 -

1. 2018년, '진보 시대 30년'의 출발
2. 시험대에 오른 소득 주도 성장론
3. 북핵 완성과 요동치는 한반도 지형
4. 지금은 역사를 보고 움직여야 할 때

1. 2018년, '진보 시대 30년'의 출발

2017년 촛불시민혁명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갈망했다.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부터 2017년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30년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사회적 양극화와 청년실업 심화 등 갖가지 부작용을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는 의연히 정착되어 왔다. 막바지에 이르러 민주주의가 도둑질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촛불시민혁명으로 멋지게 막아냈다. 지나온 30년은 그 누가 뭐라 해도 '민주시대 30년'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30년이라는 시간에 특별히 주목하고자 한다. 30년은 인간이 미래를 기획하고 손수 책임질 수 있는 최대치이다. 그 이후는 후대에게 맡겨야 한다. 거꾸로 30년은 새로운 시대를 기획할 때 능히 시야 안에 넣어야 할 시간이기도 하다. 30년 앞을 내다볼 수 있을 때 한 시대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촛불시민혁명을 딛고 새로운 시대로서 30년을 기획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객관 정세의 절실한 요구이기도 하다.

누구나 직감하고 있듯이 한국 경제는 기존 틀 안에서는 답을 찾기 쉽지 않은 상태에 놓



여 있다. 틀과 기조에서의 전면적인 전환이 불가피한 것이다. 복핵 문제 또한 한반도 지형의 전략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이 모두는 30년 안목의 긴 호흡으로 임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것들이다.

한국 경제의 출구는 문재인 정부가 공언했듯이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 복핵 문제 출구는 한반도 냉전 체제 해체에 있다. 2018년은 이 두 과제의 첫 매듭을 풀어야 하는 해이다. 두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문재인 정부 운명이 좌우될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 사회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기도 하다. 모두 최고의 긴장감을 갖고 임할 수밖에 없다.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과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는 전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징표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대는 '진보 시대 30년'이 되어야 한다. 2018년은 그 출발점이다.

2. 시험대에 오른 소득 주도 성장론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 머릿속에는 공통적으로 과거 노무현 정부의 쓰라린 실패 기억이 아로 새겨져 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개혁 이데올로기로 간주하면서 노동보다는 자본 이익 추구를, 국가 통제보다는 시장 자유를 우선했다. 그 결과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 심화였다. 게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경제 분야에서의 보수적인 접근은 참담한 실패로 이어졌다. 연간 경제성장률 등 경제 실적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한참 못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지켜본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경제 문제에 접근할 지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동을 걸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국가의 시장 개입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보수 진영에서 노동 편향이라고 부를 만큼 노동 친화적 정책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최저임금 연내 19.6% 상승을 관철시키고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재론의 여지없이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리어 이전 시기 이러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지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제는 그 어떤 시도도 국민경제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아무리 절실하더라도 국민경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 해명을 위해 동원한 이론 틀이 '소득 주도 성장론'이다.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 증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이 다시 소득을 증가시키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부자들에 비해 소득중 보다 많은 부분을 소비로 지출하기 때문에 이들 계층 소득 비중이 높아질수록 시장 확대에 의한 경제



성장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기된 ‘임금 주도 성장론’을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 현실에 맞게 적용한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홍장표 교수(현 청와대 경제 수석)가 지난해 6월 제출한 보고서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수요체제와 생산성체제 분석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실질임금 1% 증가 시 국내총생산(GDP)은 0.68~1.09%가 증가했다. 또 실질임금이 1% 늘어나면, 실질노동생산성은 0.45~0.50%, 고용은 0.22~0.5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에서 2012년 실질임금의 변화가 국내총생산과 노동생산성,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다. 더불어 홍 교수 연구에 의하며 기업의 수익성 향상보다 소득분배 개선이 투자를 더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장표 교수의 연구 결과는 정밀한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덕분에 홍 교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립된 소득 주도 성장론은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이론 틀로 채택될 수 있었다.

최저임금 16.9%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실현시키기 위해 첫 시동을 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인상 시도는 통상적으로 진행된 것 이상의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의거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론의 성공 여부를 가능할 수 있는 시험대인 것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노동자 실질임금을 증대시키면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어느 정부 관계자 표현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매출을 증대시켜 줌으로써 김밥 집 사장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진보와 보수가 첨예한 입장 대립을 보여 왔다. 진보는 최저 임금 인상 정책이 경제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 순기능을 할 것임을 다양한 논지로 뒷받침해 왔다. 반면 보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맹공을 퍼부어 왔다.

우리는 진보는 옳고 보수는 틀렸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선악 논리에서 벗어나 사태를 보다 냉철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대안 없는 판죽결기 식 보수의 비판도 문제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주도 성장론이 이야기한 그대로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진보의 안일한 현실 인식도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관계자 상당수는 최저임금 인상 - 노동자 실질임금 증대 - 경제 성장 촉진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을 철석같이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자 실질임금 증대, 경제성장 촉진이라는 세 개의 과정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소득 주도 성장론의 자기 최면에 따른 어설픈 결과일 뿐이다. 노동자 실질임금 상승과 경제성장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은 상당 정도 인정될 수 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실질임금 증대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최저임금 인상과 실질임금 증대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은 생각만큼 탄탄하지 않다.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반드시 실질임금이 증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이다.



먼저 유념해야 할 사실은 성장 동력 확보는 경제 제일의 과제라는 사실이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성장 동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는 그 어떤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197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가 겪은 장기 불황 시기는 이 모든 것을 생생하게 입증하고 있다. 성장 동력이 소진되면 분배조차도 여의치 않았다. 기존 복지 체제를 유지하는 것마저 버거운 과제가 되었다.

소득주도 성장론도 성장 동력이 확보되어 있는 조건에서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 소득주도 성장론은 성장 동력이 살아 있는 조건에서 분배 개선을 통해 성장을 원활하게 촉진하는 부속 장치이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거의 소진되어 있다는 데 있다. 슈퍼 호황을 누린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성장 엔진이 모두 꺼져 있는 상태이다. 2017년 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매출, 공장 가동률, 주가 모두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실물경제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가동률의 경우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버티기 쉽지 상황이었다. 경기에 민감한 상인들 입장에서는 장사가 안 돼 파리가 날릴 지경이었다.

성장 동력이 왕성하게 살아 있는 조건에서는 커진 파이의 보다 많은 부분을 소득 분배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임금 인상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성장 동력이 극도로 소진되어 있다면 이야기는 크게 달라진다. 지급 능력이 취약한 상태에서 사용자들은 임금 인상 압력을 흡수하기보다 다양한 형태로 저항하기 쉽다. 크게 세 가지가 예상된다.

예상되는 시장의 대응 세 가지

첫째 고용 자체를 축소하는 경우이다. 자영업 등 재무 구조가 취약한 영세 사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할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지급 능력이 취약한 영세 사업체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2018년 한 해 동안 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기금을 조성, 영세 사업체 피고용자 1인에 월 13만 원을 보조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싸늘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4대 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방안이기도 하다. 문제는 영세사업체들이 대체로 4대 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13만 원을 지원받기 위해 15만 원 정도 소요되는 4대 보험 가입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러다 보니 영세 사업체들의 재정 지원 신청은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1월 31일 현재 일자리안정기금 신청은 1.5%에 불과했다.

이런 상태에서 영세 사업주들이 선택은 어느 정도 뻔하다. 고용을 줄이거나 사업 자체를 축소 혹은 포기하는 것이다. 정부 재정 지원으로 영세업체를 최저임금 인상 대열에 합류시키겠다는 발상은 실정과 거리가 먼 탁상공론에 불과했다.

둘째 4차 산업혁명과 연동되어 로봇 등을 활용하는 노동의 기술적 대체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소지가 있다.

현재 한국은 산업 로봇 보유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이 로봇 기술 선두주자라도 된 것일까? 물론 관계없는 이야기이다. 산업 로봇 보유 대수가 높은 것은 한국의 사용자들이 인간 노동을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뿐이다. 한국 사용자들은 왜 이토록 로봇에 집착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로봇은 노조를 결성하지 않는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파업을 단행하는 등 분규를 일으킬 가능성도 없다. 골치 아픈 인간들을 대체하기에 로봇만한 게 없다. 게다가 사람을 쓰는 것보다 비용도 덜 먹힌다.

신규 공장들은 사태가 예상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16년 반도체 산업에 합계 20조 원을 투자했지만 신규 고용은 달랑 900명에 그쳤다. 석유화학업체인 한화토탈 대산 공장 경우는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음에도 추가 고용은 수십 명에 불과했다. 사람의 업무 대부분을 로봇으로 대체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로봇 사용을 포함한 노동의 기술적 대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흔히 경제는 심리라고 말한다. 사용자들은 성장 동력 소진으로 지금 능력이 취약한 상태임에도 정부 정책이 임금 상승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심리에 쫓겨 대응책을 찾기 쉽다.

셋째 세계화와 함께 폭넓게 진행되어 온 해외로의 기업 이전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2007년 이후 10년간 도착액 기준 외국인 직접 투자보다 한국 기업 대외 투자가 3배 정도 많았다. 대외 투자 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해 2007년 231억 달러에서 2016년 352억 달러로 150% 이상 증가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를 중심으로 신규 투자를 진행해 왔다. 현대자동차 경우는 1997년 이후 국내 공장 증설을 전혀 하지 않았다. 2006년 65%에 달하던 국내 생산 비중이 2015년 38%로 줄었다. 대외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이 매우 커졌다. 그로 인해 2012~2016년 사이 해외로 빠져 나간 일자리 수는 136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업들에게 해외 이전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마지막 수가 아니다. 기온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는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는 심리임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기업 해외 이전을 촉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세 가지 현상이 빚어내는 결과는 동일하다. 일자리 감소다. 이 사실은 정부 관계자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지난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모 국회의원이 정부 최저임금 정책이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자 김동연 부총리는 그게 문제라고 답한 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 예로 알바 구인 광고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함을 알려준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취업자의 실질임금 증대에는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일자리 감소로 이해 상쇄될 수 있다. 총량적 관점에서



실질임금 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 다음 이어지는 실질임금 증대로 인한 경제 성장 촉진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사용자들 대응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남은 것은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장 개입을 단행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한계가 뚜렷하다. 시장에 대한 국가 우위 시대는 오래 전에 끝났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 일이다. 정부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했다. 고용 후 2년이 경과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용자들은 2년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범망을 피해갔다. 비정규직 관련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세계화 시대 시장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지니고 있다. 시장과 대결에서 국가가 승리할 수 있는 여지는 그다지 많지 않다. '시장 이기는 정책 없다'는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의 말은 어떤 의도에서 했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

선부른 예단은 금물일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생각보다 빠르게 암초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인상 시도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입증하기 난망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정부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상황에 굴복하고 퇴행의 길을 걷든가 반대로 도약의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우려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일자리 문제 해결이었다.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 위원회까지 만들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출범 첫 해인 2017년 일자리 상황은 개선되기보다 더욱 악화되었다. 일자리 상황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청년실업률은 9.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외에 취업 준비자 같은 사실상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 '체감 실업률' 역시 22.7%로 사상 최고였다.(전문가에 따라서는 최고 50%에 육박하는 것으로까지 추정하고 있다.) 다급해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장관들을 겨냥해 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느냐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과연 질책당한 관계부처 장관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맴돌았을까? 비슷한 시기 청와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류 하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2일 '규제 혁신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규제 개혁에 관해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었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며, 규제 개혁의 핵심은 신산업·신기술을 우선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부응해 정부는 규제 시스템에 '네거티브 원칙'을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보수 매체는 일제히 문재인 정부가 규제 완화 첫발을 뗐다고 보도했다. 일부 매체는 문재인 정부가 규제와의 전쟁을 시작했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개별 정책에 대해 알가알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지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관료 집단이 어떤 프레임에 기초해서 움직이는가에 있다. 그에 의해 구조가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매체들이 총력전을 전개한 지점 중 하나는 규제 완화 프레임을 가동시키는 것이었다. 프레임은 여러 명제들을 유기적으로 연동시키는 내용 구조물이다. 특정 프레임을 수용하면 자신도 모르게 일정한 입장을 갖고 움직이기 마련이다. 보수 매체가 가동시키고 있는 규제 완화 프레임은 규제 완화로 자본이윤 추구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면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 완화에는 노동개혁으로 표현되는 노동 시장 유연화가 필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관료 집단은 생래적으로 보수 프레임에 쉽게 친숙해질 수 있다. 보수적인 규제 완화 프레임에 쉽게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랬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우리는 이미 지켜올 정도로 경험했다. 신자유주의는 보수적인 규제 완화 프레임의 결정판이었다. 그것이 야기한 결과는 극단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양극화였다. 사회적 양극화는 내수 시장 위축으로 저성장을 구조화했다. 실물경제와 금융자본 사이 불균형이 한층 심화되면서 경제의 숨통을 거세게 조였다. 보수적인 규제 완화 프레임은 결과가 훨씬 들여다보이는 그러한 과정을 다시 반복하자는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자칫 보수적인 규제 완화 프레임에 무비판적으로 휩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부터 출발한 소득 주도 성장론이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 그럴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점에 대해 최고의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최저임금 인상 시도 자체가 잘 못된 것은 아니다. 시도는 매우 정당했을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역사는 한계를 딛고 전진한다. 한계는 전진을 위한 모티브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시도의 한계를 문제를 보다 구조적이고 근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동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럴 때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 하나만으로 경제 전반이 술술 풀려나갈 수 있다면 너무 싱겁기 그지없을 것이다. 대안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도 무색해지고 만다. 새사연도 존재할 이유도 없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동을 거니까 한국경제가 잘만 굴러간다면 쓸데없는 고민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이미 사람 중심 경제로의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공언한 바 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았음에도 아직은 레토릭 수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한계를 딛고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사람 중심 경제에 대해서는 기 제출된 연구보고서 <사람 중심 경제란 무엇인가?>에서 개괄한 바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소개한 새사연 지식숲 시리즈 3에서 다룰 예정이다.)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서 정리하면 이렇다.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가치 창출의 주요 원천이 노동·자본의 결합에서 지식·감성·



상상력으로 구성되는 창조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창조력 발산은 작업자가 자발적 열정을 갖고 몰입할 때 극대화된다. 그러자면 작업자가 경제 활동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조직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권력 행사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두루 갖춘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때 생산성이 고조되면서 이해당사자 모두가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것으로서 사람 중심 경제가 일반화되자면 사람 중심 정책, 사람 중심 산업, 사람 중심 경영이 정착되어야 한다. 사람 중심 정책은 경제 활동 주체가 대체 불가능한 자신만의 고유한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사람 중심 산업은 사람의 욕망을 중심으로 재구성되는 산업으로서 건강산업·뷰티산업·재생산업·문화산업·관광산업 등을 들 수 있다. 사람 중심 경영은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삼는다.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에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큰 틀에서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최소 수준에서 기반 구축에 성공한다면 기본적인 임무는 다한 셈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 의지를 갖고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성사시켰던 시민의 창조적 에너지가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서 새로이 발산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큰 숙제의 하나는 노사 관계 프레임의 재정립이다.

권위주의 시절 한국 사회를 지배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통제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무조건적인 굴종만을 강요하는 ‘굴종적 노사 관계’가 지배하고 있었다. 1987년 민주화투쟁 승리 이후 굴종을 거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그 여파로 갈등 지향적인 노사 관계가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

갈등 지향적 노사 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권익은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신장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부산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기업과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용역업체 파견 등 간접 고용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사용자 측은 표면적 이유로 비용 절감을 내세워왔지만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용역업체 수수료 지불을 감안하면 직접 고용보다 비용 지출이 더 큰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간접 고용을 확대해 온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경로를 통해 추적해 보면 딱 한 가지 잡히는 게 있다. 일종의 노사 분류 회피 전략이었다. 다시 말해서 분류 가능성을 안고 있는 노사 관계 폭을 최소화시켜 보자는 요량이었던 거다.

노사 분류 회피 전략은 간접 고용 비중을 높이는 것을 넘어 고용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로봇 사용 등 노동의 기술적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사람과 로봇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로봇 사용이 늘더라도 일자리도 함께 늘리는 양상을 보여 왔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노사 관계에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한국처럼 갈등 지향적 노사 관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는 독일 모델은 기대하기 힘들다.



사람 중심 경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우선함으로써 노사를 포함한 이해당사자 모두가 함께 이익을 보는 경제 모델이다. 그에 맞게 노사 관계 프레임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기존 갈등 지향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8년은 노사 관계 프레임 재정립을 포함해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본격 모색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개별 이슈 중심 접근을 넘어 포괄적 비전을 확립하는 첫 걸음을 해야 하는 것이다.

3. 북핵 완성과 요동치는 한반도 지형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새벽 미국도 인정한 ICBM 발사에 성공한 뒤 핵 무력 완성을 공식 선언했다. 핵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핵물질(플루토늄, 농축 우라늄), 기폭 장치, 운반 수단 세 가지 모두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은 다방면에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모든 관측을 뒤엎은 결과였기 때문이었다. 뛰어난 정보력을 자랑하는 미국조차도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미국 본토를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 개발 시도에 대해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 아래 시종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도 그런 배경에서였다.

북한 핵 무력 완성의 파장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보수 진영이었다. 보수 진영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은 끝났다고 결론내리고 있었다. 절대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압박을 가하면 북한은 붕괴를 피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들이 보기에 남한 주도의 통일은 예정된 코스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시종 통일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취했다. 이명박은 통일세 신설을 제기했고, 박근혜는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공언했다. <조선일보>는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등 통일관련 각종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북한 핵 무력 완성은 이 모든 것을 일거에 뒤집어 놓았다. <중앙일보> 박보균 대기자에 따르면 핵무기는 불리한 정세를 일거에 뒤집는 마법의 반지와 같은 것으로서 북한이 그것은 손에 넣음으로써 체제 경쟁은 새롭게 시작되었다.

보수 진영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위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공동 입장과 여자 피겨스케이팅 단일팀 구성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과거 보수 진영은 통일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지니고 있었던 만큼 남북 공동 입장이거나 단일팀 구성에 대해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남북 단일팀 지원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러던 보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남북 공동 입장과 단일팀 구성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야당 특유의 탄죽 걸기 일환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보수 진영은 통일 자체에 대해 지극히 수세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 일환으로 미국 전략 무기가 총출동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전개하기도 했다.

한반도 정세는 요동쳤다. 북미 간에는 험악한 말 폭탄이 오가면서 금시라도 전쟁에 돌입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상황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막혀 있던 남북 간의 길이 열리고 남과 북에서 다양한 행사가 추진되었다. 남북 간의 해빙 무드가 급물살을 타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사태가 마냥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하기에는 예상되는 난관이 너무 많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과 제재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임을 공언했다. 여기에 맞서 한미합동 군사훈련 영구 중단을 요구해 온 북한이 ICBM 발사 실험 등 핵 무력시위를 감행할 여지도 있다. 핵 보유 국가 인정을 요구하며 비핵화 회담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합동 군사 훈련에 동참할 경우 남북 관계도 다시 경색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문재인 정부가 천명해온 한미 공조에 기초한 대북 압박과 남북 대화 병행은 명백히 서로 충돌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문재인 정부는 서로 충돌하는 지점 사이에서 중심을 못 잡고 갈팡질팡 헤맬 수도 있다. 상황을 주도하기는 고사하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휘둘릴 수 있는 것이다.

과연 상황을 주도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경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개별 이슈 중심으로 접근하거나 상황 논리에 의존해서는 결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접근해야 하며 포괄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북핵 위기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럴 때 두 지점을 연결하는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아낼 수 있다.

북핵 위기의 출발점과 종착점

당사자인 북한을 제외하고 국제 사회에서 북한 핵 개발을 옹호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 핵 개발은 핵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인류 보편 가치를 위배한 것이라는 점에서 '나쁜 선택'이었음은 것은 매우 분명하다. 하지만 북한이 나쁜 선택을 하도록 만든 데는 미국과 한국 정부 책임이 매우 컸다.

1990년대 초 소련 붕괴로 위기감을 느낌 북한은 미국을 향해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며 특사 파견을 요청했다.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은 대북 적대 정책을 군사 전략 유지 지렛대로 삼고 싶어 했다. 비슷한 시기 중국은 한국과 전격 수교하면서 북한을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을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북한이 믿고 의지할 나라는 지구상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 북한은 그대로 있다가는 체제 붕괴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반복된 압박 정책은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체제 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밀고 나갔다. 국제 사회는 핵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을 강패 취급하며 멸시했다. 각종 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코너로 내몰았다. 북한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북한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풀을 먹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발언은 이 모든 것을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북한은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국면 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논객들은 북한이 핵 무력을 갖춘 조건에서 협상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반대 해석도 가능하다. 과거 북미 협상이 결렬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이 북한 핵 개발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였다. 북한 핵 무력 완성으로 상황이 완전 달라졌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단순명료해진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세 가지이다.

첫째 군사적 해결. 세계 최강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의 핵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선택 불가능한 카드이다.

과거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내세웠던 명분은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것이였다. 당시 이라크가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실제로 미군 점령 이후 이라크에서 대량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점에서 북한은 이라크와 다른 것이다. 2017년 9월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말처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고 있다. 그 핵무기는 미국의 공격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은 결코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

둘째 암묵적 용인. 북한의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현상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다. 이 역시 선택 불가능한 카드이다.

일부 논자들은 파키스탄 모델을 예로 들면서 미국이 북한 핵 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내비쳐 왔지만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이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암묵적으로 용인된 핵 보유국가 모두 미국을 직접적 위협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

북한은 전혀 다른 경우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처음부터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공언해 왔다. 미국 역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 핵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북한 핵 프로그램 완성은 미국 본토가 상시적으로 핵 공격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국민 역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까지 버틸 수 있는 미국 정부는 없다. 미국이 암묵적으로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 또한 없다. 거꾸로 동북아 지역에서 핵 보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미국 이익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미국 핵우산을 전제로 유지되었던 미일동맹과 한미동맹 고리가 끊어져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협상을 통한 해결.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카드이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완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뒤 대미 협상에 나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어느 정도 분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잃은 것은 없고 얻을 것은 무척 많기 때문이다.



북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 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는 예상할 수 있다. 북미 협상은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어떤 조건에서든지 북미 관계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 관계 정상화를 바탕으로 북한을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것 이외에는 달리 출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핵화를 대가로 체제 보장, 평화협정 체결, 관계개선, 경제 보상 등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체제를 보장받으면서 외교적 고립으로부터의 탈피, 경제 도약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면 주한미군 주둔도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 모로 한반도 지형에 혁명적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북한 입장에서는 핵 무력 완성을 지렛대로 그 동안 체제를 위협해 왔던 온갖 요소들을 일거에 돌파할 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보수 진영이 북한 핵 무력 완성을 두려운 시선으로 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 가능성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협상과 대결의 두 축은 북한과 미국이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한국 정부가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과연 한국 정부는 주변적이고 종속적인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 그럴 때 북미 협상 조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한반도 지형 재편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례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북핵 문제가 처음 불거진 시기는 1990년대 초였다. 당시 노태우 정부는 미국을 향해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태우 정부는 미국이 한국에 배치했던 대량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는데 적극 동의했다. 더불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 프로그램 일환으로 남북 유엔동시가입을 성사시킴과 동시에 1992년 지바 세계탁구대회에는 남북 단일팀으로 참여해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다. 당시 남북이 함께 사용했던 한반도 단일기는 노태우 정부가 제안한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설득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했다.

1998년 미국이 금창리 지하에 핵 시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다. 로켓 발사와 관련하여 당시 북한은 광명성 1호로 명명된 인공 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발표하였고, 러시아 우주항공센터 역시 이를 뒷받침해 주었다. 반면 서방 세계에서는 장거리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인공위성 발사와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기술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그것이 지닌 군사 정치적 의미는 동일한 것이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북미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바로 그 때 1998



년 초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당시 위기 상황을 호기로 판단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 총괄 기획자인 임동원은 클린턴 행정부가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한 윌리엄 페리를 9차례나 만나면서 집요하게 설득했다. 그 과정에서 임동원은 '포괄적 접근을 통한 대북 포용 정책'을 미국 측에 제시하였다. 즉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한반도 냉전 체제 해체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에서 미국 스스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빅딜'에 나서도록 유도한 것이다.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던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였다. 1999년 10월 클린턴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담은 페리보고서를 채택했는데 골격은 김대중 정부 제안 그대로였다.

클린턴 행정부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자 북미 협상을 최종 목표로 하였던 북한은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그에 따라 빠른 속도로 현안 문제들이 해결되어 갔다. 금강리 지하 시설은 현지 방문 결과 핵 시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2000년 하반기 북한의 조명록 특사와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상호 교환 방문하는 가운데 관계 개선을 천명하는 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두 사례는 의지가 확고하고 제대로 역량을 갖춘다면 한국 정부가 얼마든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문재인 정부도 이 점에서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운전석을 차지하고 미국을 조수석에 앉히겠다고 공언해 온 것은 그러한 입장의 표명이었다.

문재인 독트린과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북핵 문제는 개별 이슈 중심 대응이나 상황 논리에 의존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환경 자체를 총체적으로 바꾸어내는 차원에서 포괄적인 해법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만이 갈등 관계에 있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모두를 설득할 논리 구조도 구축될 수 있다.

과연 포괄적 해법을 담을 수 있는 최적의 프레임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프레임을 자주 사용해 왔다.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선택일 것 같지만 면밀하게 따지고 들면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적합한 프레임이 아님이 드러난다.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과 달리 평화는 진보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다. 평화는 의외로 쉽게 보수 담론에 의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평화가 확보되었는지를 되돌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류 역사에서 평화가 정착된 것은 대체로 절대 강자의 지배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었을 때이다. 절대 강자가 둘 이상일 경우는 힘의 균형이 유지되었을 때이다. 절대 강자의 안정적 지배가 사라지거나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평화는 심각한 위협을 받았다.

근대 이후 가장 평화스런 시기는 20세기 후반이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었다. 먼저 자본주의 진영 안에서 미국이 절대강자로 군림하면서 과거 종종 있었던 열강들 사이의 분쟁이 억제되었다. 더불어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 사이 힘의 균형이 유지되면서 냉전이라는 이름의 평화가 유지되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라고 했을 때 당사자가 어떤 맥락에서 그 표현을 사용했든 관계 없이 적지 않은 국민들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 핵심 수단은 한미 공조에 기초한 힘의 우위 확보이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을 떠받치고 있는 관료 집단의 사고 또한 대체로 이런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프레임은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할뿐더러 해결 과제와 방향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한다. 거꾸로 보수적 안보 프레임에 힘을 실어주기 쉽다.

북핵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법을 담을 수 있는 최적의 프레임은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이다.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프레임은 지정학적 특성을 반영한 한반도의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한반도는 미소 냉전이 처음 시작된 곳이다. 냉전의 부산물로 분단된 곳이며, 분단의 결과로 한국전쟁을 경험한 곳이다. 한국전쟁에서는 오늘날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맞붙어 국제전을 치르기도 했다. 한국전쟁은 휴전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북한과 미국이 두 당사자가 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휴전 상태에서 북미 두 나라는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냉전 체제 해체 이후도 변함없이 적대 관계를 지속시켰다. 북한 핵 개발은 이러한 적대 관계 지속이 빚어낸 부산물이었다.

한반도는 가장 먼저 냉전이 시작된 곳이면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지구상 마지막 냉전 시대이다. 한반도 위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로서는 원통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이 사실은 한반도 냉전 체제 해체 프레임이 갈등 관계에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두루 설득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 과연 어느 누가 불행으로 점철된 한반도 냉전 체제 해체를 대놓고 반대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냉전 체제 해체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북한과 미국 모두 우선적으로 여기에 동의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로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공동의 전제 조건 확보 없이 북한 비핵화부터 끄집어내는 것은 하수 중 하수가 두는 수순이다.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는 북핵 문제의 근원과 해결 방향도 함께 알려 준다. 한반도 냉전 체제의 핵심 축은 휴전협정을 통해 법리적으로 표현되고 있다시피 북미 간의 적대 관계 지속이다. 북미 적대 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이다. 북한이 더 이상 핵 무장에 집착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북핵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한반도 냉전 체제 해체는 안보에 대한 시각도 함께 전환시킨다. 보수적 안보 프레임은 적대 관계 지속을 전제로 힘의 우위 확보에 집착한다. 반면 한반도 냉전 체제 해체는 적대 관계 청산을 통한 안보 환경의 전면적 변화를 추구한다. 위협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위협 자체를 해소시킨다.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는 한반도 냉전에 책임 있는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에서 응분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과거 6자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는 남북한과 미·중·일·러가 참여하는 집단안보 체제를 함께 모색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한반도는 동북아 균형자로서 위상을 확보한다. 남북한의 협력이 강화될수록 동북아 균형자로서 위상은 높아질 것이며, 거꾸로 동북아 균형자로서 위상이 확고할수록 남북한의 협력은 더



욱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관점에서 보았을 때 북핵 문제는 위기로 다가왔지만 한반도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프레임에 기초한 북핵 문제의 포괄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문재인 독트린’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미국 등 관련 당사자들을 집요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 양상을 보이는 북미 두 나라가 협상 타결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4. 지금은 역사를 보고 움직여야 할 때

저우언라이는 마오쩌둥 시대 2인자로 활약했던 현대 중국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런 저우언라이에게 서방 인사가 200여 년 전에 있었던 프랑스대혁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저우는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답을 했다. 수백 년의 흐름을 읽는 유구한 역사의식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다.

역대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촛불시민혁명 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서둘러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하는 조급성을 보였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과제들은 대체로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 이번에 다른 경제와 북핵 문제는 더 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

서울공대 교수들이 함께 지은 <축적의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풀어 보자. <축적의 시간>에 따르면 과거 한국 산업은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며 뒤를 쫓는 추격 전략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추격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은 시기가 왔다. <축적의 시간>은 한국 산업이 살려면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창조적 축적’을 통해 독자적인 ‘개념 설계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념 설계 역량은 과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의 속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창의적 해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가리킨다. <축적의 시간>은 구체적인 예로서 독특한 해양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해양플랜트 개념을 창조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역량, 화학물질 생산 프로세스를 새로이 설계할 수 있는 역량, 사물인터넷을 기술 플랫폼으로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할 수 있는 역량 등을 꼽고 있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개발하면서 종전 통신기기로서 휴대폰에서 벗어나 ‘손 안의 컴퓨터’로 새롭게 정의한 것 역시 개념 설계를 대표하는 사례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 산업은 개념 설계 역량에서 절대적으로 취약했다. 개념 설계 대부분을 선진국에 의존해야 했다. 우리가 담당할 설계 영역은 잘 해야 한 단계 낮은 기본 설계였고, 그 보다 더 낮은 상세 설계였다. 그 과정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해당 선진국 기업으로 흘러들어 갔다.

개념 설계 지식은 대부분 교과서나 매뉴얼, 논문, 특허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관련 지식은 사람들 머릿속이나 일하는 방식에 체화되어 있어서 해당 기업을 인수·합병해도 흡수하기 쉽지 않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지식인 것이다. 개념 설계 역량은 오직



지난한 축적이 시간을 거쳐 획득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는 개별 기업과 국가적 차원에서 지난한 축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 산업 경쟁력에서 절대 우위를 회복할 수 있다. 그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으로서 통상 10년 정도를 잡고 있다. 모든 차원에서 10년 인고의 세월을 헤쳐 나갈 헤쳐 나갈 안목과 인내력이 절실한 것이다.

문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청년 세대의 절박성이다. 당장 오늘 하루 버티기도 쉽지 않은 형편인데 10년을 참고 견디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뒤 따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알기 위해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투기 양상을 띠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서명이 줄을 이었다. 청원 제목은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였다. 1월 16일 서명자 수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수치인 20만을 넘어섰다.

300만에 이르는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 대부분은 20~30대 청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상당수는 이른바 흑수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몰려든 이유는 여러 가지였을 것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와 있는 그대로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반영이라 보고 투자할 수도 있다. 또한 많은 언론들이 다루었듯이 유일한 동아줄이자 탈출구라 믿고 투자할 수도 있었다.

가상화폐 존재 가치를 둘러싼 향간의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접어두는 것으로 하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의 가상화폐 투자 대응을 계기로 드러난 청년 세대의 의식 구조이다. 청년 세대의 의식은 국민청원 제목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에 집약되어 있다. 이 한 문장은 그동안 청년 세대가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강렬하게 시사해 준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해소 등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 조차도 청년 세대에게는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다.

청년 세대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을 품도록 해주는 것이다. 축적의 시간으로서 10년은 무조건 참고 견디는 시간이 아니다.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포괄적 비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잉태하는 창조적 시간이다. 새로운 미래의 주역은 청년 세대이다.

청년 세대는 내일의 꿈과 희망이 확실하다면 당장의 금전적 이익이 충분치 않다 하더라도 기꺼이 오늘의 어려움을 견딜 것이다. 새로운 미래를 잉태하는 역동적 과정에 뛰어들어 이를 마음껏 즐길 것이라 믿는다.

이왕 청년 세대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더 짚어 보자.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만들자 20~30대 청년 세대 안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북한이 갑질을 했다는 표현도 나왔고, 출전 기회가 줄어든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들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기도 했다. 20~30대의 반발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수행 지



지울을 떨어뜨릴 만큼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보수 매체와 정당들은 보란 듯이 이 사실을 집중 부각시켰다. 남북 단일팀 결성 소식이 알려지면 환호할 것이라 믿었던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장면이었다.

물론 20~30대의 반응이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판단이 정책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엄밀히 말해 한반도 평화는 청년 세대 미래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 일환으로 추진된 남북 단일팀 구성은 청년 세대의 미래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인 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세력은 86세대이다. 86세대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신념 체계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다. 자기 확신이 그 어느 세대보다도 강하다. 통일은 절대선이고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한 치의 의심도 갖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단일팀 구성을 둘러싼 시각 차이는 86세대 신념이 오만과 독선으로 흐를 수 있음을 깨우쳐 주었다.

86세대 사고를 절대적으로 규정지어 온 것은 그들이 몸을 던져 헌신했던 1980년대 민주화투쟁이었다. 그로부터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세계사의 국면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한 무수한 변화들이 일어났다. 소련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냉전이 해체되었고, 디지털 문명을 바탕으로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었다. 한국은 민주화가 정착되면서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올라서기에 이르렀다.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시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거대한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전혀 새로운 시대를 배경으로 태동했다. 2차 산업혁명에 익숙한 86세대와 달리 청년 세대의 사유 체계와 감성 구조는 3차 산업혁명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 결이 완전 다르다.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용납하지 않는다. 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도 없고 통일을 절대시하지도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86세대가 자신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옳으니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으로 나간다면 단일팀에서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문제인 정부 지지층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존 틀 안에 갇혀 있으면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틀과 기조를 완전히 바꾸는 완전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과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로 집약되는 핵심 과제들은 모두가 긴 호흡을 갖고 임하지 않으면 성공을 기약할 수 없다. 지금 절실한 것은 당장의 금전적 이익보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할 꿈과 희망을 창출하는 것이다. 전혀 새로운 시대를 배경으로 태동한 청년 세대의 출현은 전혀 새로운 소통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한 마디로 집약해서 표현하면 이렇다.

“지금은 역사를 보며 움직일 때다!”



2018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8년 02월 01일 현재

분야	발간일	제목	작성자
보건의료	01/08	2018년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평가	고병수
정치	02/01	문재인 정부 운명을 좌우할 두 가지 과제	박세길